

# KMI 동향분석

**VOL.115**  
2019 APRIL

발간년월 2019년 4월(통권 제115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4.27 판문점선언 1년

### 해양수산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윤인주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장

(mouthpiece@kmi.re.kr/051-797-4724)

허재영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진희권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고, 평화의 길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큰 틀을 제시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 마련, 안전 어로 보장 등을 합의하면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다시 내딛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서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남북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안전 보장 등 군사적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서해벨트 구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 이행 현황을 보면,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남북 간 일체 적대행위가 중지되고, 동·서해 군 통신선이 복원되었으며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한강(임진강)하구 민간 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사전 조치로 남북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고,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제작했다. 우리 정부는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해 서해 5도 인근 어장을 확대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도 취했다.

이와 같이 동·서해는 남북협력에서 중요한 공간적 위상을 차지하나 실무적인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 동·서해공동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거시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공동연구와 현지조사 진행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

과거 해양수산 남북협력은 해운과 수산 분야에서 주로 추진되었다. 남북 해상로 운항과 북한 수산물 반입·유통 등이다. 최근 북한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항만,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남북협력 수요가 예상된다. 대북제재 하에서는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쉽지 않으므로 수산종자 지원이나 수산자원 방류 등 인도적·환경적 협력 또는 한강하구 공동이용방안과 관련한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핵 문제 해결 이후에는 북한 항만이나 수산가공 유통단지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문점선언 이후 해양수산 남북협력 의제의 재등장과 이행 현황, 성과와 한계, 향후 전망을 검토한 결과,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가능하고 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해 평화수역의 환경보호(침적쓰레기·폐어망 수거)’와 ‘동해 어장의 자원조성’과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수산·해운·항만 분야의 학술·기술·일상용어 비교사전 편찬은 본격적인 남북협력 활성화를 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 필요하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운 당국 간 협의기구 설립이나 북한 경제발전과 한국 경제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항만 현대화·개발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현재 여건상 남북교류 접점이 있어야 북한의 현황과 수요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중요한 수단이다. 철도·도로, 환경(산림), 농축산 등 유사한 분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수산 남북교류 접촉점을 확대하고, 참여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해양수산 남북협력 의제 재등장

### ■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선언

- '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측 지역을 방문, 평화의 길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함
-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함

### ■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등을 합의

- '07년 10.4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재확인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합의함
- 판문점선언은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평화수역 조성을 통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동·서해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

- '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함
-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해주항 활용과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등 10.4선언의 사업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공간범위는 열려 있음
- 금강산관광 산업의 우선 정상화 추진과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기존 개성·금강산 지역 사업이 동·서해 연안으로 확장되고, 신경제구상의 동·서해벨트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안전 보장 등 신뢰 구축에 기여

-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6.4합의서’<sup>1)</sup>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함
- 서해상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하여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함
-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 한강(임진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남북 간 공동 수로조사 및 민간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18년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함

표 1. 2018년 남북 공동선언 및 합의서 주요 내용

구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b>주요 합의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발전</li> <li>·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li> <li>·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li> <li>· 남북정상회담 정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적 긴장완화</li> <li>· 남북교류협력 증대</li> <li>· 아산가족 문제 해결</li> <li>·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대행위 중단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li> <li>·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li> <li>·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li> </ul>
<b>해양수산 관련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우발적 충돌방지, 안전한 어로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li> <li>·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li> <li>·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조직</li> <li>· 북방한계선 해안포, 함포 사격훈련을 포함한 일체 적대행위 중단</li> <li>·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역설정 및 공동조사 진행</li> </ul>

자료: 통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6.4 합의서’에는 ①국제상선공통망 운용, ②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③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이 포함.  
6.4 합의서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문을 지칭하며 정식 명칭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로 주요 내용은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서해 제3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통제를 위해 관련 동향과 정보 교환,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 등

##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해양수산 분야 합의 이행 현황

### ■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군 통신선 복원 및 연락망 가동

- '18년 6월 14일 판문점에서 4.27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 진행,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와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4합의서’ 복원에 합의함
- 7월 1일 남북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교신이 재개되었으며, 7월 16일 서해지구, 8월 15일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함
- 11월 1일 0시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되었으며,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중단함
- 11월 2일 오전 9시 남북 군 당국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함('04년 6.4합의로 시작되었다가 '08년 5월 이후 중단)

### ■ 분단 이후 최초로 한강하구 수로조사 남북 공동 실시, 민간 선박 자유항행은 보류

- '18년 10월 26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한강하구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 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10명)을 구성, 11월 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제작함
  -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진행된 조사로 강화군 말도에서 파주시 만우리 구간 약 70km(면적 약 280km<sup>2</sup>)에 대해 수심 측정과 7개 주요 해역의 조석 관측이 함께 진행됨
  -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석지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1개의 암초를 발견함
- '19년 1월 30일 남북 군사당국 실무접촉을 통해 조사결과보고서와 해도를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4월 말 현재 북한 측의 응답이 없어 보류함
  - 4월 1일, 김포시가 한강하구 입구까지 시범항행을 실시함

그림 1. 한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조사와 해도 전달 장면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



그림 2.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위치 및 지도



자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표 2. 2018년 남북 공동선언 및 합의서 중 해양수산 관련 이행 현황

구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통한 교신 재개(7월 1일)</li> <li>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7월 16일)</li> <li>동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8월 1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11월 1일 0시)</li> <li>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 교환(11월 2일 오전 9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강(임진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조사 진행 (11월 5일-12월 9일)</li> <li>남북 군사당국 실무접촉 통해 수로 조사결과 보고서와 해도를 북측에 전달,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 허용하고 단계적 확대 합의(19년 1월 30일)</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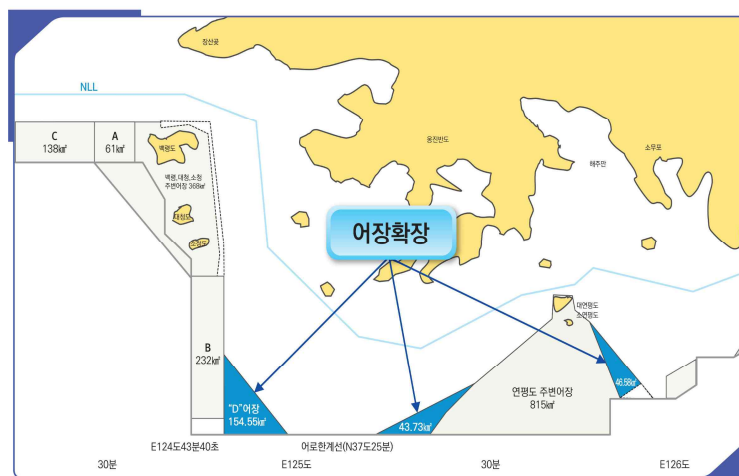
자료: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야간조업 일부 허용,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 우리 정부는 '19년 4월 1일부터 서해 5도 어장을 245km<sup>2</sup> 더 확장(기존 1,614km<sup>2</sup>, 15% 확장)하고, 일출 전·일몰 후 각 30분씩 총 1시간 동안 야간조업을 허용키로 함
- 북미 간 협상 교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서해 경제공동특구 실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 피력과 함께 서해 평화 정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서해 5도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어민은 확장된 어장의 위치가 멀어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단속 완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함

그림 3. 서해 5도 인근 어장 확장 지도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24870>), 2019년 4월 30일 검색

## ■ 남북해운합의서 등 다른 기존 합의 이행 관련 준비 필요

-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함
- 10.4선언 합의 사안 중 현재 논의가 중단된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05년 체결된 ‘남북 해운합의서’ 등 해양수산 분야의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건이 조성되면 ’10년 5.24조치 이후 운행이 중단된 남북 해상로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등도 필요함

## 해양수산 남북협력 성과와 한계, 향후 전망과 과제

### ■ 동·서해는 남북협력에서 중요한 공간적 위상을 차지하나 실제 논의는 미흡

- 판문점선언 이후 해양수산 남북협력 의제의 재등장과 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양수산 분야는 남북한 공동의 관심사이며 우선적·실질적·상징적 협력 의제임을 확인함
- 정상 간의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동·서해는 남북협력에서 중요한 공간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작업한 실제 성과물 역시 한강하구 수로조사임
- 한강하구 수로조사는 북측에서 희망하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의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거시적 환경 조성이 뒷받침되지 못해, 남북정상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과 속도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는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 단계에서는 공동연구와 현지조사 진행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임

표 3. 2018년 남북 공동선언 및 합의서 중 해양수산 관련 성과 및 한계

구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성과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합의	·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	· 한강하구 공동수역에 대한 남북한 최초의 공동조사 실시
한계	· 협이기구 등의 형식이나 평화수역의 범위와 내용 등에 추가논의 필요	· 공동특구의 개념이나 범위, 내용 등에 추가논의 필요	· 공동이용방안에 대한 추가논의 필요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는 유사한 타 분야에서 추진되는 공동연구와 현지조사, 실무회의와 비교할 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측면도 있음
- 국가기간교통망 중 철도·도로는 남북 분과회담과 현지조사가 있었지만 항만 분야는 미개최
- 항공 분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18.11.16)가 있었지만 해운 분야는 미개최
- 환경협력에서 산림협력은 분과 회담과 현장방문이 있었지만 해양 환경 분야는 논의가 없음
- 그 외 민간의 인도적·사회문화적 교류에서도 농축산 대비 수산 분야는 활발하지 않은 편임



## ■ 과거 해양수산 남북협력은 해운과 수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 과거 남북경협 당시를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남북해운합의서<sup>2)</sup>에 따른 해상로 재개와 북한 수산물 반입·유통이 예상됨
-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으로 북 고성 남강과 안변 남대천 일대에 연어치어방류('01~'04)를 비롯해 연어부화장('03)과 양식사료공장('08) 건립을 추진한 바 있음
- 실현되지 못했던 남북 간 실무회담 의제<sup>3)</sup>로 우리 측 어선의 북한 동해 어장 입어, 수산가공, 수량품종 개발, 양식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 최근 북한 동향 고려 시 수산, 해운, 항만, 환경, 관광 분야 협력 예상

- 농축산업과 함께 수산업을 인민생활 향상의 3대축으로 강조함에 따라 특히 내수면양식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북측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13년부터 북한이 지정한 경제개발구는 국가나 지역의 부담 없이 외국개발기업의 투자로 하부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철도, 해운 등 하부구조 발전과 연관 지역 간 경제적 연계 도모를 희망, 특히 남포항 인근 수출가공구(와우도, 송림, 진도, 강남) 관련 개발 수요가 예상됨
- '18년 5월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에 가입하고 청천강 하구 아래 평안남도 문덕군과 함경북도 나선시에 위치한 철새보호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 54개 습지 목록을 공개했으며 생태관광을 관광업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고려함
- '19년 3월 북한 남포시 대표 시찰단이 중국 보하이(渤海) 페리 그룹 주식유한공사를 방문, 중국 산둥반도·랴오둥반도와 북한 남포항 간 여객 화물 항로, 호화 크루즈 항로 건설 협력 관련 MOU 체결, 보하이 페리가 북·중 해상 황금 노선에서 독자 경영권 확보가 예상됨
- '19년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중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여객운수” 문제를 언급했으며, 선박공업성을 신설함에 따라 조선과 해상운송 분야에서도 북측의 개발 수요가 예상됨
- '20년 4월까지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 계획, 연간 100만 명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대규모 리조트·호텔·맨션·수영장·마리나 등 건설로 해양관광 개발 수요가 예상됨

2) 민간 선박의 상호 영해 통과 인정, 해상항로대 설정, 안전항해 보장, 사고시 응급조치, 선원과 여객의 신변보장 귀환 등, 7개항만 상호개방(인천, 부산, 포항, 군산, 여수, 울산, 속초/남포, 원산, 청진, 해주, 고성, 홍남, 나진) 합의

3) '05.7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07.12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제1차 남북 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상 의제

## ■ 향후 해양수산 남북협력은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차별화 전망

-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대북제재 여건 하에서 경제협력이 재개되기 어려우므로 수산종자 지원이나 수산자원 방류 등 인도적·환경적 협력 또는 한강하구 공동이용방안과 같이 중립적인 공간에서 남북 각자의 수익사업을 모색하는 이전과 다른 남북협력모델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핵 문제 해결 이후의 남북경제협력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북한 항만 개발이나 수산가공·유통단지 개발 등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표 4. 향후 해양수산 남북협력 전망

과거 남북협력 및 의제	최근 북한 수요	대북제재 여건 하	핵 문제 해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해상로 운항</li> <li>· 북한 수산물 반입</li> <li>· 연어방류·부화장·사료장</li> <li>· 북측 동해 어장 입어</li> <li>· 수산가공</li> <li>· 우량품종 개발</li> <li>· 양식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양식</li> <li>· 수출가공단지</li> <li>· 해운 조선</li> <li>· 생태관광·해양관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종자 지원</li> <li>· 수산자원 방류</li> <li>· 한강하구 공동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항만 개발</li> <li>· 수산가공·유통단지 개발</li> </ul>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대북제재 여건 하에서도 협력 필요성 높은 사업부터 실시해야

- 판문점선언 이후 해양수산 남북협력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을 검토한 결과,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가능하고, 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서해 평화수역의 환경보호(침적쓰레기·폐어망 수거)’와 ‘동해 어장의 자원조성’과 같은 사업은 동·서해와 관련한 기존 합의에 발맞추면서 국내 현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남북협력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임
- 수산, 해운, 항만 분야에서는 학술용어, 기술용어, 일상용어 등에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남북 용어사전 편찬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해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업은 북측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장비반입 등의 문제가 없으며, 대북제재 관련 국제사회의 입장을 거스르지 않고,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전 작업임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사항도 검토 시작해야

- 남북교류가 사람과 물자 간의 흐름임을 고려할 때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이후 해상으로 재개를 대비하여 남북해운합의서(제13조)에 따른 남북 해운 당국 간 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함
- 대규모 자본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항만 현대화·개발은 향후 북한의 수출지향형 경제발전과 한국 경제 활로 모색에도 중요하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분과회담이나 현지조사 등도 추진이 필요함

## ■ 해양수산 남북교류 접촉점의 확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한강하구 수로조사와 같이 남북교류 접점이 발생할 때 북한 측의 관련 현황과 수요 파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남북교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건상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남북 간 상호이해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본격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남북협력 수단임
- 철도·도로, 환경(산림), 농축산 등 유사 분야 남북교류를 참고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교류 접촉점을 확대하고 참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병!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햇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bunker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URL: <https://www.kmi.re.kr/>